
쿠바 개혁: 집단 상상력, 반론, 비판적 시선¹⁾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학생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던 말인가?

— 2014년 여름 쿠바 텔레비전이 방송한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DAR+)에서 내보낸 노래 가사 중에서

드미트리 프리에토 삼소노프·이사벨 디아스 토레스 |

원제와 출처: Dmitri Prieto Samsónov and Isbel Díaz Torres, “Las reformas cubanas: imaginarios, contestaciones y miradas críticas”, en *Osal*, No. 36, Diciembre de 2014, pp.17-46.

핵심어: 개혁, 프리카리아트, 노멘클라투라, 자본주의, 저항, 사유

현재 쿠바에서 진행 중인 개혁에 대해 누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입장/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자의 실천/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만일 우리가 정직하고 끈기가 있다면 말이다). 이런 행위자는 시간의 흐름(현실화²⁾-철학적 의미의 현실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 말의³⁾ 선진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현실화)을 보여주는, 망각, 은폐, 다시 쓰기, 드러남이라는 우주에 매몰되어 있는 동시에

1) 글이 장황하여 쿠바의 개혁을 다룬 부분만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편집자.

2) “현행적인 것이 현재적인 것은 아니다. 현행적인 것이란 움직이는 것이다.” 이미 20년 전에 어느 쿠바의 시인은 이렇게 썼다.

3) ‘경제 모델의 현실화’를 가리킨다. 공식 담론에서 ‘개혁’ 대신에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런 우주의 원천이자 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간이란 때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건으로 가득 차 있고, 알렉산드르 루키야넨코의 소설에⁴⁾ 나타나는 평행세계처럼 부채꼴로 펼쳐지는 다양한 미래이다.

이 글은 쿠바의 갖가지 체제순응담론에서 작동하는 상식과 공식 담론에 감춰진 권력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고의 산물이다. 우리 분석의 토대는 쿠바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쿠바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역동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석의 출발점이다.

쿠바의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 중차대한 순간(쿠바 정부의 공식 담론이나 무반성적인 여론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을 살아가고 있는 쿠바인들의 의미 추구는 사회적 사실의 해석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인간 해방이라는 통합적인 기획에 부합하는 개혁안 수립에서도 참신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공식 개혁안의 사회적 투사

쿠바의 공식 개혁안은 현재 정계와 매스컴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문헌, ‘당과 혁명의 경제사회정책노선’(Lineamientos de política económica y social del Partido y la Revolución. 이하 ‘노선’으로 약칭한다)에 성문화되어 있다.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이 ‘노선’은 인민이 참여한 여러 공식 공간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초안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그러나 토론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비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선’은 상당히 절충적인데, 토론에 부친 시안 작성에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는 흔적이 여실

4) 세르게이 루키야넨코의 『나이트 워치』를 가리킨다 — 옮긴이.

히 드러난다. 그리고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로부터도 전체적인 발상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좌파의 비판은 기술관료적 논조에 집중되었다. 건설한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선’이 채택한 미래 전략의 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공식 담론의 논리 부족,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훌륭한 개혁 모델을 장려하는 경우에 심각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모델의 현실화’⁵⁾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듯이, 인민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과 지원방안보다는 경제개혁의 몇몇 측면에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좌파는 시장경제 요소의 채택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민간 부문의 핵심 파트가 권력을 쥐게 되리라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어도 자주관리를 옹호하는 좌파의 비판, 즉 비판적 전망(Observatorio Crítico), 참여민주적 사회주의(SPD), 무지개 프로젝트(Proyecto Arcoiris)가 제기한 비판—은 관료의 권력이나 국가통제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자발적인 노동자조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인민이 상거래와 공적 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우파는 경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시각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별다른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국가와 정치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5) “‘모델의 현실화’라는 완곡한 표현에서 우리는 중국식의 느리지만 확고한 이행, 즉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정치권력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떠올린다. 우리 쿠비는 아직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소규모 민족자본주의와 거대한 초국적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고, 이에 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고 사회정책을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중국식] 발전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Rogelio Díaz Moreno, “Año tras año: Nuevas luchas para viejos empeños. Notas manuscritas para la intervención en el Comité Ejecutivo Internacional, diciembre de 2013”. <http://www.mundosocialista.net>)

‘노선’은 경제 개방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개방은 스페인, 캐나다, 중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영국이 출자한 합작기업과 비사회주의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수출하는 의류서비스와 같은 핵심 상품 뿐만 아니라 니켈(셰리트 인터내셔널), 호텔의 관광 상품(솔 멜리아 그룹), 담배, 알코올성 음료, 설장 같은 부문도 대폭 개방하고 있다.

이처럼 ‘노선’은 관련 기업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경제개혁을 도입한 한편, 기생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관료화된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을 갈수록 더 많이 허용하고 있다. 또한, 쿠바의 현 개혁 상황(‘경제 모델의 현실화’라고 부른다)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⁶⁾)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체 논리와 사유화 논리가 대립하는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기회는 공통성(the common) 강화에서 생길 수 있다.

쿠바는 하트와 네그리가 『다중』에서 공통성과 정동(affects)의 생정치적 생산⁷⁾

6) 이 말은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 규정이 아니라 노동 유연성과 같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민민의 삶의 불안정성에 기초한 계급 규정이다— 옮긴이.

7) 우리 사회를 위한 해방 프로젝트는 환경적인 자원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생태주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쿠바가 어떤 식으로 대안적 기획을 버리고, 세계체제의 약탈적 관행에 합세할지가 관심사이다. 쿠바는 은밀하게 국가 또는 브라질 기업과 협력하여 옥수수, 대두 같은 유전자 변형작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참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농업 분야 정책이나 전략에서 항상 배제되고 있다. 유전자조작기술은, 20년 이상 발전해왔고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은 쿠바의 생태농업 모델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쿠바는 시급히 유전자변형작물의 자유로운 재배와 보급을 금지하고, 식량생산과 관련한 고유의 기술과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쿠바에는 이런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저명한 과학자 집단도 있고, 비록 규모는 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도 하고 있다.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파괴 또한 문제이다. 쿠바의 최우선 과제가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쿠바는 외국인 백만장자들에게 미개간지에 위치한 현대식 골프장의 영구소유권을 허용하려고 한다. 최종 목표는 관광객과 쿠바 부르주아를 위한 대규모의 주거·호텔·골프 복합단지 건설로 보인다. 이를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여러 회사와 협상하여 쿠바 최초의 합작기업을 세울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비를 조달하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청정에너지 국가로서의 쿠바 이미지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에너지원, 특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멕시코만에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정(추정 매장량 20억 배럴)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5년에서 7년 안에 매일 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다. 이 수역은 59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이라고 부르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는 곳이다. 정치경제학과 사회 혁명의 핵심 문제, 즉 어떤 사회적 행위자가 권력이나 생산을 전유하는가의 문제가 쿠바에서 다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곡의 무게.

가면을 벗고 현재의 사회계급적인 쿠바 바라보기

쿠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입장을 분석하기 전에 주요한 집단 행위자와 사회 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밝혀두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자본주의에서 방향을 돌린 '사회주의 의향 국가'에서⁸⁾ 체제 옹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

있으며, 그중 22개소는 Statoil-Repsol-OVI(노르웨이, 스페인 그리고 인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소난콜(앙골라), 중국 국영석유회사, 가스프롬(러시아) 등과 위험담부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결과는 부정적이고, 수많은 실패 후, 석유 시추선도 상당수 철수했다. 그러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은 산유국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인프라 구축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열병합발전소의 현대화 이후, 시엔푸에고 정유공장 건설, 시엔푸에고에서 마탄사스까지 잇는 송유관 건설, 60만 배럴 규모의 마탄사스 원유저장소 건설, 10억 달러 규모의 마리엘 항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매일 1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만 배럴의 비용은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가 25년 동안 1%의 이자율로 융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쿠바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이 없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대부분이 쿠바 도시를 오염시키며 쓰레기통에서 사라지고 있다. 쿠바의 연간 폐기물 처리량은 430톤에 지나지 않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재활용 정책은 여전히 담보상태이다. 최근 소식으로는 재활용 물품을 수거하는 12개 조합이 곧 문을 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4년에 그나마 평가할 만한 요소이다.

8)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의향 국가'라는 용어(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야 하겠지만)를 두루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련이 구성한 것과 같은 사회는 역사적으로 '현실 사회주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사회,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사회주의'(국가통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라고 명명했다는 점을 밝혀두어야겠다. '사회주의 의향'이라는 용어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의도를 가진 주민으로 구성된 거대한 그룹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준다. 사회주의를 의도하는 국가는 아직 도 남아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레닌주의 학파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편리한 점도 없지 않지만 비판적 성찰과는 거리가 멀다.

1. 쿠바 현실에 대한 사회계급적 해석의 표준 모델

1936년 소련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수많은 곳에서 모방하였고, 1970년대에는 쿠바에 적용된 표준 모델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사회계급은 노동계급(사회주의 혁명에서 전위로 간주한다)과 동맹계급으로 구성된다. 동맹계급은 협동농장의 농민계급(두 번의 농지개혁 이후에 동질화된 소농)과 대중에 봉사하는 혁명적 지식 인층(대다수는 출신성분이 미천하다)이다. 1968년의 ‘혁명적 공세’, 즉 소기업의 국유화 이후 프티부르주아(도시의 소자산가: 운송업자, 수공업품 생산자)는 최소화되었다.

1990년대 구조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그룹이 출현했다(대부분은 미국유⁹⁾ 경제 부문과 연관이 있다). 쿠바의 사회과학은 이 그룹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 기초단위협동조합(UBPC)의 구성원. 이들은 집단농업노동자 출신으로, 지금은 합법적으로 토지 공동 사용권을 취득하여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에 임하고 있다(계급적 성격은 노동자와 협동농장농민 중간에 위치한다).

2) 개인 명의의 농지 사용권 취득자(농업생산자는 임노동자와 계약할 수 있으며, 공식 언론매체는 “주인이 임금을 잘 지불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임노동자의 증언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3) 동일 계급의 대다수 동료보다 물질적으로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임노동자(유

9) 여기에서 미국유(no-estatal)란 사회주의적 국가소유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 옮긴이.

자격자 또는 무자격자). 이들은 ‘노동귀족’과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합작기업이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곳은 “호텔의 벨보이가 외국 의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향간의 말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된 얘기다.

4)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문은 자영업¹⁰⁾ 대열이다. 1993년에 역동적인 경제영역으로 인정받았고, 2013년 업종 확대 조치 이후 날로 확장되고 있는 영역이다. 자영업자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므로 단순히 프티부르주아로 규정하기보다는 계급 성분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유 형태로서 자영업은 개인만 아니라, 임금보다는 협동 노동이 우선인 비농수산협동조합(CNA)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협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된 업종은 운송업, 도소매업, 수공업업, 요식업, 직물업으로, 개혁 추진의 사령탑 격인 노선구현위원회(Comisión de Implementación de Lineamientos)에서 엄선한 것이다.¹¹⁾

이러한 표준 모델은 명확한 사회적 차이(예컨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구별하고는 있으나 사회·경제·문화적 권력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쿠바의 이데올로기적·문화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실을 감추어버린다. 그렇다면 과연 쿠바 사회계급 구조의 표준 모델에 끼어 있는 허위의식은 무엇일까?

10) 쿠바에서 자영업(trabajo por cuenta propia) 또는 자영업자란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즉 주인과 종업원까지 포함된다 — 옮긴이.

11) 이 노선구현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혁 가운데는 국영기업(현재는 협동조합적 성격과 임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과 ‘아래로부터’ 설립된 협동조합도 있다.

2. 허위의식

1) 자영업 문제

자영업에 대한 쿠바 공식 언론의 담론은 신흥 비국유 생산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날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과소소비와 공급부족 등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자영업은 어느 면에서 '경제 모델의 현실화'의 기치이며,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기획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 뒤에는 사회의 분열이 숨어 있으며, 이는 미래에 전개될 계급투쟁의 씨앗이다. 자영업이라는 간판 밑에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각양각색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다. (1)개인이나 가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은(땅콩을 원뿔 모양 종이봉지에 담아 길거리에서는 파는 사람도 엄밀히 말하자면 자영업자이다) 내수시장용 상품 생산이라는 틀에 포함되며, 임노동이나 노동착취와는 무관하다. (2)자본주의적 소기업의 고용주(레스토랑, 중·대규모의 민영 카페, 민영 게스트하우스, 택시회사 등의 주인)는 신흥 프티부르주아 또는 신흥 중간부르주아에 해당한다. (3)이런 고용주와 계약을 맺은 노동력(일명 '고용계약 자영업자'. 통계상 자영업자 범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역시 엄밀히 말하자면 자영업자에 속하지만 자본가가 아니라 임노동자이다(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 즉 쿠바 프레카리아트의 일부이다).

2) 노멘클라투라 문제

쿠바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유사 국가기관(정치단체, 사회단체, 대중단체, 국영 기업, 유한회사)의 조직도를 보면 직접 참여나 대표를 통한 호선(互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급간부는 고급간부가 임명한다. 의사 결정과 집행은 밑실에서 사

전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멘클라투라는 논쟁과 같은 공적 공간이나 선출직 기관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많은 경우에 대표(예를 들어, 인민권력 전국회의나¹²⁾ 인민권력지방회의에서)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당의 회의이든, 사회적이거나 대중적인 모임이든 파울로 프레이리가 민중교육방법론에서 얘기한 규범을 따르기는커녕 주입식 논리(lógicas bancarias)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곳에서는 지식과 권력과 언어를 소유한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고, 엘리트는 이를 뽑낸다.

레닌이 언급했듯이, “사회주의 내부의 가장 큰 적”인 관료주의가 사회주의의 향 국가에서 맨 얼굴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소위 ‘노동자농민 권력’이라는 보증수표나 알리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도부, 즉 관료화된 노멘클라투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노동하는 사람을 위해 정권을 수립할 역량도 없고 의사도 없다. 노멘클라투라라는 단어는 공적인 지위 또는 당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일컬으며, 이런 사람은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기 전에 집권당 내의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내정된다. 이 용어는 1920년대부터 소련의 볼셰비키 당 기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으며, 반체제작가 미하일 보슬렌스키가 『노멘클라투라』를 통해 사회적 범주로 일반화시켰다. 소련의 특권계급이다.

허위의식은 사회현실을 숨겨왔다. 이런 허위의식은, ‘과학적 사회 지도’라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랑하던 바를 실행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데서 나온 산물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래한 운영관리기법이 쿠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다. 이는 1921년 소

12) 인민권력전국회의(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는 쿠바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으로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국회 정도에 해당한다 — 옮긴이.

련이 신경계계획을 도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사회주의 의향 국가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도적 리더십, 조직 문화, 기업 관리 기법 등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지식인이 만들어낸 '선진' 경영 기법을 받아들였다. 그 범위는 테일러리즘에서 가치경영(아직도 쿠바에서는 참신하게 여기고 있다)까지 이른다.

레프 트로츠키는 스탈린식 관료주의가 단순한 카스트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착취계급인지 명료하게 밝히지 못한 채 1940년에 사망했다. 마지막 저작에서 트로츠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전쟁의 결과로 서유럽에서 반자본주의 사회혁명이 승리하고 소련에서 반관료주의 정치혁명이 발생한다면, 관료의 권력 독점이란 근본적으로 1917년 혁명 시기 러시아의 경제적·문화적 후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식 관료주의는 적당한 기회에 국가 권력과 볼셰비키당 지도부를 장악해버린, 단순한 기생 카스트라는 의미이다. 둘째, 이와 반대로 서유럽과 소련 사회 내부의 권력구조가 전쟁 전과 비교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는 관료주의가 이미 1920년대부터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역사의 장에 진입했다는 징표이다. 이런 점에서 밀로반 질라스는 사회주의 의향 국가(유고슬라비아)에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계급'(1957년에 출판한 질라스의 혁신적인 저서명이기도 하다)을 분석한 선구자였다(트로츠키 생전에도, 신관료계급이 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출현하고 있다고 암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대표적 예가 『경영자 혁명』(1941)이다. 이 책은 새로운 계급에 대한 분석을 주도한 선구자이자 당시 트로츠키를 추종했던 제임스 번햄의 주저이다. 소련에서 추방당한 보슬렌스키는 『노멘클라투라』에서 소련의 신관료계급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듬고 심화시켜서, 당의 고급간부 시스템이 어떻게 새로운 계급 논리를 만들어냈는지 논했다.

1956년 헝가리사태, 1980년 폴란드사태(이곳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관료가 주도하는 타율적 질서에 맞서 자신들만의 제도를 만들어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을 겪고도 자칭 ‘공산주의노동자당’의 이론가들은 스탈린주의 명제를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으며, 관료는 다른 사회그룹에¹³⁾ 가식적으로 동화되었다. 이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라는 의식을 관료에게 심어주려고’ 수많은 실험을 했으며, 이 때문에 자주관리론자의 비판과 무정부주의자 비판이 가치가 있으며, 이 때문에 1989년 국가사회주의가 무너지고 1991년 소련 해체라는 종족적·생물학적·지정학적 재앙이 생긴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쿠바에서 새로운 계급의 형성 과정이¹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당 간부는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권력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는 노동자의 논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쿠바에 노멘클라투라 계급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권력자들은 밀실에서 결정하거나(투명성이 매우 낮다) 복잡한 호선 방식을 통해서(때로는 보완책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유사한 과정을 동원한다)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프레카리아트 문제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은 재산도 없이 식솔만 거느린 계급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생겨났다. 고전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계급에 적용된 단어

13) 이 사회 그룹에는 헤게모니를 쥔 노동자계급, 농민계급(집단화된 농민, 바꿔 말해서 협동농장의 농민), 지식인계층(종종 관료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위장한다), 애국적인 프터부르주아가 있다.

14)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가 옴트고 있다. 근대의 모든 위대한 혁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 가리켜 ‘지배의 이행’이라고 부른다(Dmitri Prieto Samsónov, *Transdominación en Haití*, Ciencias Sociales, La Habana, 2010).

로, 마르크스에 따르면 두 가지 면에서 자유롭다. 즉 인간으로서 자유롭고(노예가 아니라는 뜻이다), 재산으로부터 자유롭다(재산이 없다는 뜻이다).

소련의 선전물과 1930년대 이후에 등장한 사회이론은 ‘프로레타리아 국가’를 더 이상 찬양하지 않았다. 또 ‘소비에트 사회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은 농민화된 사람들 및 기타 동맹그룹(1950년대에는 이들을 묶어 ‘전체 인민대중’이라고 불렀다)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이론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국가)가 공장, 작업장, 광산, 대농장, 학교, 연구기관, 문화센터 등의 소유자인 것이다.

당시 소련 노동자는 국가 부의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또는 ‘전체 인민의 것’이라고(쿠바 헌법에 등장하는 표현) 여겼고, 따라서 모든 게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자신이 프로레타리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쿠바의 현실은 훨씬 복잡할 것이다.

최근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정확하게 말하자면, 쿠바에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바로 프레카리아트(*precariado*)이다. 스페인, 그리스,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공식 경제에서 노동하지만(즉, 실직 상태는 아니다) 그러한 노동이(노동유연성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서)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고전적 의미의 프로레타리아트처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이른바 고용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경영진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해서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던 각종 보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노동유연성이 강화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 노동계약이나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계약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의미이자,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일상 경험이나 사회 조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쿠바 노동자는 월급과 보조금으로는¹⁵⁾ 한 달을 버틸 수 없다.¹⁶⁾ 그러므로 노동자는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만 한다. 여기에는 해외송금과 같은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른바 가윗벌이(búsqueda 또는 lucha)처럼¹⁷⁾ 그다지 합법적이지 못한 것도 있는데,¹⁸⁾ 이를 가리켜 쿠바 인류학자인 파블로 로드리게스 루이스는 성서에 나오는 말을 차용하여 변통(rebusque)¹⁹⁾이라고 불렀다. 물론 쿠바 사람들은 기초사회보장(교육, 보건, 등)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보장은 축소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부가 효율적으로 노동자에게 이전된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대다수 쿠바 사람들의 생활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15) 다양한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몇 달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노동자 식당 이용권 대신에 태환페소(CUC)로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

16) 라울 카스트로는 여러 번에 걸쳐 “임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인민권력전국회의 연설을 참고하라.

17) búsqueda의 문자적 의미는 ‘찾기’이고, lucha의 문자적 의미는 ‘투쟁’인데, 쿠바에서는 ‘부업’, ‘가윗벌이’를 뜻하는 은어이다 — 옮긴이.

18) 국가의 부를 빼내오는 모든 방법, 즉 조직적인 사취, 뇌물, 언론 보도를 이용하자면 ‘야매로’(por la izquierda)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바꿔 말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인(불법적이거나 준합법적인) 사회경제망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망은 당국으로부터 자율성을 부여 받은 모든 공간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산된 부가가치는 ‘변통’을 통해서 다시 분배되는데, 이때 상품논리와 더불어 안전도 중요하다. ‘변통’은 많은 경우 생산 단위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시내버스 기사는 버스가 고장 나면, 필요한 부품을 “좌측으로부터”(비공식적으로) 구해서 자기가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정비기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도 버스기사는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버스를 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기사는 자리가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버스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무사히 자리를 유지하고, 공식경제(가정경제와 사회경제)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9) 2014년 아바나의 학술대회의 발표문(이 책에 실린 파블로 로드리게스 디아스의 「쿠바의 변통 문화 이해를 위한 소고」 — 옮긴이). 성서에서 rebusque란 수확한 후에 남은 작물을 비공식적으로 거두는 행위를 말한다(정확한 성서의 의미는 ‘이삭줍기’ 또는 ‘씩쓸이’이다. 레위기 19:9, 신명기 24:20 참고 — 옮긴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띠고 있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디아스가 지적한²⁰⁾ 바와 같이 쿠바에서 가난은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이는 가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 쿠바의 사회계급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사회적 이거나 학문적인 논의는²¹⁾ 노동계급의 문제, 바꿔 말해서 기초단위협동조합(UBPC)²²⁾ 조합원이나 새로운 법에 따라 국가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계층을 상이한 사회계급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다. 최근에는 이른바 자영업(쿠바에서 이 말은 임노동 고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시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사항은 이런 연구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이나 인간과 맺는 공식적인 관계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통은 정의상 비공식 관계이다. 그리고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상당수 쿠바 남녀(아마도 대다수)가 월급만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수입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렵다).

이는 쿠바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사실로, 쿠바 현실에 접근하려는 어떤 연구도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다수 쿠바 남녀의 일상 삶에서 비공식 부문은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같은 비공식성을 고려하는 것은(변통의 계급적 차원을 염두에 둔다면) 쿠바

20) Pablo Rodríguez Ruiz, *Los marginales de las Alturas del Mirador*, Fundación Fernando Ortiz, La Habana, Cuba, 2011. 최근 마리아 델 카르멘 사발라(María del Carmen Zabala)와 마이이라 에스피나 프리에토(Mayra Espina Prieto)도 쿠바의 가난을 연구하였다.

21) 잡지 『테마스』가 주최한 토론 참고.

22) 기초단위협동조합은 농업 분야 소상공인을 말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농수산협동조합은 텃밭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일하는 사람들은 협동조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에 프레카리아트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사회 계급은 고용주(쿠바에서는 국가나 다른 공식 단체)가 지급하는 임금으로는 생필품도 구입하기 어려울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쿠바의 프레카리아트는 생정치적 생산 과정과 결합된 다양한 정체성 형성과 국제적 문화교류 그리고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내적으로 필요한 의미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프레카리아트화된 주체는 명확한 집단적 기획(다시 말해서, 사회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산물이다.

쿠바에서 프레카리아트의 존재(공식적인 수입으로 생계를 충당하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하루 벌어들여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이다)는, 공식적인 사회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쿠바의 현실, 잠재력, 경향, 상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3. 그렇다면 쿠바에서 먹거리와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것과 개혁은 어떤 관계인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한 사회를 복합적으로 보아야 쿠바의 현재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생활 세계 전체를 출현시키고 또 제약 하며, 이러한 생활 세계에서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무하는 의미가 잉태된다. 먹거리와 의미의 생산은 계급에 따라, 성에 따라, 정체성에 따라 다양하다. 경제적 토대는, 경쟁하는 여러 생산양식의 총합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주제를 이 글에서 다룰 엄두가 나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 생산양식을 열거할 수는 있을 것이다.

1) 국가할당 생산양식. 이는 20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통제주의 체제의 전형적인 생산양식이다. 여기에는 착취계급으로서 노멘클라투라, 피착취계

급으로서 프레카리아트, 노동귀족(프롤레타리아), 화이트칼라 지식인, 농업 분야의 임노동자 그룹도 포함된다.

2) 자본주의 생산양식. 이 생산양식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합작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민족자본기업(자영업)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부르주아, 화이트칼라 관리자, 노동귀족과 프레카리아트 그룹이 포함되며, 이 모두는 노멘클라투라의 정치적인 통제 하에 있다.

3) 협동조합 생산양식. 농업과 비농업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장접근 수준이나 비조합원과의 노동계약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멘클라투라의 통제 수준도 다양하다.

4) 비공식적·가족적·가정적 생산양식. 비공식 세계이자 변통의 세계이다. 쿠바 프레카리아트에게는 먹거리의 원천이고, 레게이톤(reggaetón)과 같은 새로운 대중문화 표현에서는 의미의 원천이기도 하다. 국가 규제와 노멘클라투라의 통제는 거의 없으며, 상품관계, 호의와 신의의 상호성관계, 연대관계, 친족관계가 혼합되어 있다. 또 가정 경제, 재생산 노동, 직접소비 영역이 어우러진 것이기도 하다. 불법과 배제의 영역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알레한드로 모레노가 이야기한 ‘인민의 생활 세계’와 미셸 드 세르토가 말한 삶의 ‘전술’(전략은 아니다)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5) 단순 상품 생산(자영업의 미시 영역). 현재 쿠바 정부 주도의 개혁은 사회경제구성체(칼 마르크스) 또는 쿠바의 사회문화구성체(다르시 리베이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변화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노선’의 기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도 없다. 이러한 변화의 성격으로 인해(이미 언급했듯이, 잡지 『테마스』가 주최한 토론에서) 쿠바의 노동계급(프레

카리아트화된)의 재생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프롤레타리아나 프레카리아트는 자영업이나 여타 계획(예를 들어, 이민)에 경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 세대에 계 사회계급을 계승하라고 말하지 못한다. 놀라운 일은,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이 노멘클라투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소수만이 당 간부가 되길 원한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경도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쓸림 현상은 국가의 과도한 규제만 없다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 글에서 쿠바 정부주도의 개혁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행동주의 용어로(또는 고지식한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으로) 비판할 의도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반대론자들이 국내외의 구체적인 그룹들의 열망, 기대, 계획을 정치적 코드가 아니라 예술적이고 대중문화적 코드로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반)유토피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좌파 활동가인 야스민 실비아 포르탈레스 마차도는 “개인적인 정치 아젠다가 없다는 것은 꿈을 포기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반대 이야기도 타당하다. 생활 세계를 향해하는 사람들의 꿈 역시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낸다. 이런 아젠다는 내재적이어서 쿠바의 들녘이나 길거리에서 아젠다라고 공표하고 다니지 않을 뿐이다. 쿠바에서 명백한 것은 아래와 같이 양분된 현실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 광범위한 비공식 경제의 작동 여부는 이 경제에 몸담고 있는 개인적 행위자의 신뢰(영어로는 ‘trust’)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런 비공식 경제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는 흥미롭게도 비구조적이고 코된적인 관계망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계망에서 값비싼 품목을 거래할 때 필요하다면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명성이나 평판을 과시한다.

2. 공동체에서 신뢰를 구축한 개인의 특성(많은 경우 가족의 특성, 특히 주변 사람



쿠바의 시장

들과 상대방이 잘 아는 내력에²³⁾ 근거하고 있다)은 자신과 거리가 먼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 ‘집’, ‘가족’, ‘우리 동네’(종종 지나치게 추상적인 관점에서)²⁴⁾라는 범주에 속하는 않는 것은 경시한다. 이리하여 내 것이 아니면 억지로 빼앗거나 더러는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증거이다.

누가 1990년대 국산품 애용 구호(‘우리 것 먼저’)를 잊었겠는가? 이런 식으로

23)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계 아바쿠아(Abakua) 족 남자들의 신의 구축 기본 원리이다.

24)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아바나의 서민이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길거리나 공원 그리고 광장처럼 함께 이용하는 다중공동구역은 효과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만든 관료화된 단체에 양도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땅도 아닌 땅’으로 인식된다.

가잇돈 벌이(즉, 변통의 정치경제학을 통합하고 있는 복잡한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인 부의 전유·개인화·재의미화)의 윤리적·인식론적 전제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진정한 불법 부문으로, 쿠바의 실질적인 가치 사슬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쿠바는 지난 2년간 안정적인 국제 관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적·물적·의미 교류에 참여하는 쿠바인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저항으로 요동치는 동안 쿠바는 고유한 모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사회적 행위자는 이미 자기 모델을 선택했고, 다른 사회적 행위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 모델이 이제 막 출현했기 때문이다. 역동성이고 대립적인 사회 모델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회참여적인 연구자는 명확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미래 비전의 생산을 요구하는 입장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한 적은 없다. 쿠바 정부는 이행의 사회경제적 모델보다는 이행의 규범 만들기에 더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구성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획의 성격보다는 구조적 요소나 구체적인 사안을 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비전이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다.

몇몇 부문에서는 비전을 찾아볼 수 있다. 일레가 마리엘 항(현재 브라질 자본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으로 재건하고 있다) 발전특구 지정이다. 이 대규모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쿠바의 미디어는²⁵⁾ 매우 세련된 기술관료적 수사법을

25) Noticiero Nacional de Televisión, 2014년 5월 20, 21일 방송.

동원하고 있다. 즉, “노동력 가격”, “인적 자원 획득”, “본국과 비교할 때 쿠바 전문가의 가격” 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쿠바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모두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쿠바의 기술은 인터넷 연결부터 시작하여²⁶⁾ 현대화 (aggiornamento)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권력을 기술관료에게’와 같은 구호가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위원, 결정권자부터 불만자, 반대자²⁷⁾(보통은 반체제인사로 해석한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에는 정치적 충성을 보이는 행위자도 여기에 포함된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 슬로건을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장개혁이라는 관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지금은 개인투자와 시장경제적 관계(특히 임금노동자 고용)를 확대하면 번영 하리라는 경제논리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하는 사람을 ‘인적 자원’이나 ‘인간자본’, 아니면 단순히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쿠바 기술관료와 사회 여타 부문 사이의 양면적인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기술관료는 변화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쿠바 사회가 다원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부문이 대화하는 개방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지식과 권력을 가진 그룹으로서 기술관료 집단이 여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양면성과 기술관료 집단 내부의 양면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양면성이다). 사회적 다원성에 대한 기술관료의 모호한 태도 혹은 양면성은 개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배타적인 현상 유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그들 안에 공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6) 야이마 파르도의 다큐멘터리 OFF LINE(2013) 참고.

27) 전통적인 반체제 반공주의자(우파 반대세력)는 노동법 초안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법은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사적 영역 경제 주체의 권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것이다.

해결된 문제와 이 문제의 이데올로기적·계급적 결합가

광범위한 쿠바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세법

2013년 인민권력전국회의에서 새로운 세법이 승인됨에 따라 복잡한 조세제도(1960년대에 최소화되었다가 '특별기'라고 부르던 1994년 다시 도입되었다)가 대폭 확대되고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다. 새로운 세법은 19종의 세금, 3종의 재산세, 3종의 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한 세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1960년대부터 임금 총액은 예전에 세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공제하고 난 후의 순가치로 계산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더 이상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양한 부문에서 요청한 국가 예산도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예산 수립 과정도 불투명했는데, 국가 기관의 사무실에서 숫자를 조작했다. 외국환으로 거래하는 소매상 물품은 국제시장 가격의 24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고, 이는 상당수의 쿠바 인민에게 영향을 미쳤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물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보호관세를 채택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상당수 물품도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법

2012년부터 발효되었고, 연금수혜 연령을 5년 정도 상향 조정하여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에 수령한다. 이미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은퇴 인구²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28) 2008년 쿠바중앙노동자연맹(Central de Trabajadores de Cuba)는 인구의 노령화와 공적 분야의 노동잡

생필품

상당량의 국가 배급품(배급표, 즉 생필품)과 함께 다달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량 배급량도 감축하여 이제 일주일분만 배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번에 개최된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는 논의조차 불가능했다. “배급품을 재판매한다”는 식의 논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지엽적인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인당 배급량은 겨우 가내 소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배급표에 따라 지급하는 식량 배급량의 감축은 최빈곤층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쿠바의 강단 좌파와 활동가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배급제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써 도시민의 수입이나 기초 소득과 관련된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지출의 삭감

보건 분야(보건소와 병원의 폐쇄, 도시 외곽지역 환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중심지’로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집중되는 문제), 문화 분야(예산 축소, 예술과 문학 창작에 대한 상급과 기관 폐쇄), 스포츠 분야(예산 감축) 등에서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있다. ‘노선’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지출 삭감으로 인민(특히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재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은퇴 연령을 5년 더 연장하는 사회보장법의 제정에 협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영역에 잉여 노동력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쿠바노동자본부는 노동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의 자영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사회지출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무상배급, 지나친 보조금, 공부라는 직업, 조기 퇴직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이 쿠바노동자본부는 자영업자(주인)와 계약 자영업자(피고용인)를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아직 미진하기는 하지만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업(자영업)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한데 묶어서 노동조합(?) 설립하고, 공식기구인 쿠바중앙노동자연맹에 가입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한편, 많은 사업주는 지방혁명수호위원회의 업무까지를 떠맡게 되었는데,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 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윤리와 합법성의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반면, 반체제 우파, 국외 이주자, 친정부적인 경제학자(몇몇 친정부적인 종교단체도 그러하다)는 “효율성과 국내 생산에 대한 기여”를 들어 개인 사업 업종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노멘클라투라는 저금을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때로는 자기 명의로 개인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관료에서 부르주아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냈다. 이런 길을 택하면 공공재를 민영화할 필요도 없으며, 아직도 국가와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관리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점에서는 마이애미의 쿠바 동포를 비롯하여 해외거주 쿠바인에게 받은 송금을 자본화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쿠바에는 자금세탁금지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튼, 개인사업자의 등장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이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재산을 증식하여 자본가계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주택과 사업장) 매매를 허용한 새 법의 공포로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사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도 ‘체류용 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아직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새 법은 주민의 주택 매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

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주택을 점유한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예전에는 법이 권리를 보호했으며,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도 있었다). 이로써 남보다 불리한 사람들(돈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파는 사람들)의 소유권 상실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의 결과로 야기된 또 다른 불균형이다.

공공부문의 해고

2011년부터 국가 부문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대량 해고되었다(국가가 최근 50년 동안 유일한 고용주였다는 것을 상기하자). 국가가 설정한 목표는 사적인 부문(자영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언론에 밝힌 계획으로는, 5년 이내에 15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경제와 군사의 연계

군에 종속된 기업이 농업 생산(유전자 이식 포함), 정보통신, 환경보호와 보호지역의 관리, 동식물 관리, 인프라 투자, 관광, 건설 및 확대 중에 있는 전략적인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노동법

이번에 통과된 노동법은, 임노동에 대한 개인적인 착취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유급휴가는 줄었고,²⁹⁾ 성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으며, 임금 기반 고용과는 상이한 고용체계의 노동자와 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정도 없다. 쿠바에서 파업권은 1960년대 대기업이 사라졌을 때 불필요한

29) 이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으며, 노동정의심판소(Organo de Justicia Laboral)에 제소할 수도 없다.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영업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프레카리아트가 신흥민족부르주아와 외국부르주아 계급에 압력을 행사하고 교섭하는 데 필요한 전략무기를 없애 버린 꼴이다.

지난 55년간 제한된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 사회계급적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한다.

- 현재 쿠바인은 국내관광이나 해외관광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태환폐소만 받는 호텔에 투숙할 수 있고, 해외관광여행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광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멘클라투라, 부르주아, 해외송금수혜자 등만 가능하며, 대다수 국민, 특히 청년과 노인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과거에는 견학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열가 여행이 가능했지만 이런 유형의 여행이 부활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새 이민법. 이제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쿠바를 떠날 때 출국허가(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었다)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의 출국허가는 이데올로기적인 여과장치였으며, 전통적인 우파 반체제세력의 핵심적인 불만사항이었다. 이제 여과장치는 경제적인 면에 있다. 여권발급 비용이 평균 임금의 5배에 달하며, 대부분의 목적지 국가는 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사용권을 가진 토지의 양도. 쿠바 농민이 토지를 생산력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경우라도 사용권은 10년이 최고 한도였다. 반면 외국인이 근교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99년간 사용권을 취득하며, 평생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 주택이나 자동차의 상품화. 예전에는 국가가 독점하였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이제는 사적 거래를 허용하였다. 이런 거래 자유화는 부동산사업이나 자본주의 자동차회사는 물론이고 국내의 사적인 중개인에게도 중요한 자본축적의 장(場)이 되었다. 반면에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

통과 주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협동조합. 2012년 말, 비농수산협동조합(CNA) 설립법이 공포되었다. 쿠바의 사회경제문화 속에서 자주 관리를 통한 협동노동의 권한강화 방법으로 협동조합 결성은, 좌파 특히 참여민주사회주의(SPD: Socialismo Participativo y Democrático), 하이데 산타마리아 지지자 모임(KHS: Cátedra Haydée Santamaría), 비판적 전망(OC: Observatorio Crítico), 알프레도 로페스 절대자유주의공작소 (Taller Libertario Alfredo López), 강단지식인 그리고 카밀라 피네로 아르네케르, 페드로 캄포스 산토스, 펠릭스 사우티에, 인티 산타나와 같은 활동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제정된 협동조합법을 보면(기본 틀은 생산협동조합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조합 승인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노선시행전국위원회가 최종심의기구인 데서 짐작하듯이, 그다지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협동조합은 대부분 농수산 도소매(소련의 상업협동조합은 마피아식 자본주의로 향하는 진입로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운송, 수공업품에 국한되어 있고, 직업별 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다른 나라에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저항의 핵심이었다) 등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위로부터' 협동조합 설립(국영기업의 전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특히 임원)이 기존 문화를 바꿔서 비임금적이고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에 기초한 사회관계를 지향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불균형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비농수산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내 기관도 없고, 국제협동조합동맹(ACI)에 가입할 수도 없다.

- 스포츠의 직업화. 국내외 경기 결과에 의거하여 운동선수에게 보수를 지급하던 방식이 2013년에 개혁되었다. 쿠바인은 이미 몇몇 프로 리그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대표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 쿠바 정부는 아

마추어 정신을 지키고 스포츠를 사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인터넷 접속. 2013년 국영기업 쿠바정보통신회사(ETECSA)는 한 시간 당 4.50태환페소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전국 133개소에 피시방을 개설했다. 이 피시방은 채팅이나 무선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엄격한 사용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필터 기능을 하고 있다. 사용자는 입장할 때 성명을 비롯하여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감시공무원이 검열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피시방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외국에 접속하기는 어려우며, 인터넷이 허용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에서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외국에 접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상의 개혁이 대중에게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왜냐하면 불평등과 사회계층화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이는 1959년 혁명이 만들어낸 도덕규범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익 분배에서 기존 엘리트 그룹은 특혜를 받았고, 이로써 새로운 권력계급으로 입지를 다졌다. 반면에 대중문화에서는 젊은이의 창조적인 재능이 환영받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성공' 모델이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소비자, 이기주의자, 섹스중독자,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자, 연대나 비관적 성찰이나 차이의 존중에는 무관심한 자, 그리고 냉소적 실용주의로 정치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것은 반항일까, 아니면 순응일까?

[남진희 옮김]